

칼럼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공수처설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의미

올해 들어서자마자 고위공직자 비리를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완성됐습니다. 공수처설치법과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정부는 1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른바 오는 7월부터 공수처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공수처설치법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창설 71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깎아내리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공수처 설치에 오래전부터 여야정당 공히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2004년 총선 당시 정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권력형 부패 척결을 위해 현존 사정 기관의 혁신 차원에서 부처간 의견 조율을 거쳐 국회에서 논의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입법 초기단계에서부터 정치 중립, 수사 독립, 권력의 집중 장악 등의 논쟁이 불거져 질질 끌려오다 드디어 법제정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첨예한 논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에 '감찰기능을 무력화시킨다.'거나 '육상옥'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만 권력형 비리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검찰, 경찰이 다른 부담없이 고유 역할을 맡아 전제적으로 사정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길 기대합니다. 수사 기구를 다원화로 사정 기관간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범국가 차원에서 사정 기능의 생산성 제고를 바라는

다. 이날 정부는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은 개인이나 회사가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공직자로 한 공직자 자신의 사익과 연고관계 등이 개입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거나 저해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이 관리 또는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부패행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다양한 이해충돌의 범위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관리, 운영하거나 사업자 등에게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또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부정한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을 도모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와 인사담당 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둘째로 보건대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이런 이해충돌 방지 조항들을 중심으로 제정한 이른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을 국회에 넘겼으나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평계를 대안전 배제했지요.

공수처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청렴 선진국에 조기 진입하길 기대합니다.

### 社 說

### '동원예비군 축소' 신중해야

군 당국이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를 앞두고 필요한 동원예비군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니 지켜볼 일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동원소요 판단'을 하고 있다. 동원소요 판단은 전시 때 군이 어느 정도 규모의 동원예비군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 단축한다고 밝혔다. 훈련 기간 단축으로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은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든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은 275만명이 유지된다.

전역 후 1~4년 차에 해당하는 동원예비군은 전시 등의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소집된다. 별도의 예비군 부대나 동원사단 등에 편성돼 전시 작전에 투입된다. 합참은 전시 편성되는 동원예비군 부대 등 운용에 95만명이 충분하지, 전시 필수적인 동원예비군 부대가 어느 정도인

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이 전시 작전 수행에 동원예비군 95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원예비군 훈련단축은 2022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대외적으로 축소 계획을 공표한 만큼 군이 동원예비군 95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줄어든 인원에 따라 전시에 운영되는 예비군 부대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필수적인 예비군 편성 부대만 남겨놓고 일부 부대를 통폐합할 가능성도 있다.

군은 전시 주요 작전에 투입되는 동원예비군의 전력 유지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 단축과 장애 회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예비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예비군 장애 회를 위해 훈련과 장비를 강화하고 예산도 늘려준다는 취지를 추후 발표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공장 화재예방은 이렇게 하세요!

산업도시가 공장의 대형화·밀집화·전기화 및 가스화 되어 목재가공·석유화학·조선소 등 공장화재의 피해액이 대규모가 되며 발생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공장 내부에 수용물이 종이박스·비닐박스·플라스틱·경유·기름쓰레기 등 위험물질인 인화성·발화성 또는 유독성이 강하고 많이 산적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화재가 진전되며 연소 확대우려가 많고 대형화재가 쉽다.

지난 새벽 경기도 00군 종이공장에서 공장화재가 발생하여 1억여원 이상 피해액이 추정되었다. 대형 공장화재를 예방하려면 공장 내·외부의 주변 환경정리를

철저히 잘 하고, 노후하고 불량전선을 적정한 시기 즉 5년에 최소한 한번씩 교체하여 전기합선, 전기누전, 과부하, 과열 및 정전기를 예방하며, 작업을 중지할 때에는 철저히 전원차단을 한다.

쓰레기통 담배꽂초투기 주의·쓰레기 소각 주의·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담배꽂초를 사전에 예방한다. 공장 내부의 구조나 설비 또는 기계·기구를 수선이나 수리할 때는 가연물 제거 및 주변정리를 잘 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놓고 산소용접이나 절단 및 작업을 실시한다.

쓰레기 소각 등 할 때 119신고를 철저히 하며, LPG·LNG·

도시가스 등 가연성이 높은 가스를 취급할 때는 매일 1회 이상 가스누설 확인을 철저히 하고, 안전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와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한다.

공장 내부의 통풍이 양호하고 가스의 저장온도는 40℃ 이하이며,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저장창고에 넣어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지한다.

그리고 자체난방을 하기 위하여 유류를 저장한 위험물탱크나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누유와 유증기를 잘 제거하고, 유사시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화기·방화수 및 방화사를 비치하여 신속한 진압태세를 갖춘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 사전에 자위소방대 등을 조직하여 사용방법 및 조작훈련을 실시하여, 우리 공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안전관리 정신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할 것이다.

공장관계자·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및 경비원 등 주·야간 방화순찰을 철저히 하고,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가정·차량 및 업소에 반드시 소화기를 한 대 이상 비치해야 할 것이며,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119소방서에 신고를 한 후 모든 사람에게 큰소리로 알리고 반드시 피난유도하며, 연소확대 방지를 하면서 화재를 진화하기 시작한다.

백중희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명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정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회장·발행인 김 평 호
<b>호남신문</b>	편집인·편집국장 강 서 원
대표전화 (062) 229-60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고국 (062) 224-5800	서울취재 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기사제보 (062) 971-7400	Tel (02) 2238-0003
팩 스 (062) 222-5547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터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어문진흥재단

문화응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